

주제어: 조로수호통상조약, 한소 수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환기  
국제질서, 한러관계

Keywords: Korea-Russi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Korea-Soviet  
normalization, Russia-Ukraine War, Transitional international  
order, Korea-Russia relations

투 고 일 : 2025. 05. 30

심 사 일 : 2025. 05. 31~2025. 06. 01

게재확정일 : 2025. 06. 02

# 조로수호통상조약 140년\*

## - 전환기 국제질서 속 한러 관계의 역사적 반복성과 현재적 함의 -

황 성 우\*\*

### 목 차

- I. 문제제기
- II. 한국과 러시아의 만남과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 III. 냉전체제 붕괴와 1990년 한러수교
- IV.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과 1990년 한소수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V. 결 론

### 국문요약

본 논문은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체결 140주년을 맞아, 한국과 러시아 간 외교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구조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전개돼 왔는지를 국제질서의 전환기라는 시각에서 분석한다. 특히 1884년(제국주의 질서의 확산기), 1990년(냉전의 종식기), 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재편기)이라는 세 시점을 중심으로, 한러관계가 반복적으로 등장한 구조적 조건과 외교적 패턴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러관계는 단절과 단선적 진전의 반복이 아닌, 전환기마다 전략적 필요에 따라 형성되는 경계적 파트너십이며, 기회와 제약이 공존하는 구조적 이중성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논증했다.

또한 본 논문은 각각의 시점에서 한국이 한러관계를 통해 어떠한 외교 전략을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신질서 재편기 속에서 한러관계가 어떠한 방향성과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한러관계는 단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미래의 질서 설계 과정 속에서 전략적 선택의 좌표로 기능할 수 있는 동태적 관계임을 밝힌다.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102950).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교수

## I. 문제제기

2024년은 조선과 제정러시아가 통상조약을 통해 수교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였다. 1884년 7월 17일(음력 윤달 5월 15일) 체결된 조로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은 조선과 제정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외교 및 경제 관계를 수립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당시 조선이 청(淸)의 간섭을 줄이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체결됐으며, 그런 까닭에 조로수호통상조약은 이후 한러 관계의 원형적 기초를 형성하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다시 말해서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은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의 수교와 오늘날 ‘한러 관계’<sup>1)</sup>의 역사적 기원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양국 협력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조선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에 청과 일본, 미국과 서방세력 사이에서 러시아를 견제 세력으로 활용하며 외교적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한국도 미·중 경쟁 속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꾸준히 탐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과 동방정책, 한국의 **新북방정책**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 두 국가의 협력은 한국의 외교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단지,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2년 5월 출범한 한국 정부의 한미일 진영 간 결속 강화 추구 여파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세계 속에 편입되면서 러시아에게 비우호국가로 지정되는 등 한국과 러시아는 잠시 외교적 휴식기를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였다. 조로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는 육로통상장정(장정) 체결, 삼국간섭, 아관파천(俄館播遷) 등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시도했고, 냉전기에는 북한과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국과 수교한 1990년 이후에는 주로 한국과 경제협력을 통해 탈냉전 한반도 분위기를 주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이 친우크라이나 진영에 편입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 북한과 가까워지면서 한러관계에

1) 소련이 해체된 이후 소련의 구성공화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는 한국과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소련이 갖고 있던 국제법상 지위를 러시아가 계승하면서, 한소 수교는 한러 수교로 대체됐다.

변화가 발생했고, 특히 북한군 파병은 오늘날 한반도 문제 중 북핵 문제와 더불어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

근대 이후 한반도는 국제정치의 대표적인 발화 현상이었다. 한반도는 오랜 기간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 질서 속에 유지돼 왔다. 기존의 중화적 국제질서가 붕괴된 시점은 19세기 서세동점의 격동기에 중국이 서구열강들의 침략에 무너지고, 동북아가 서방 열강들의 세력각축장이 된 때였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열강들의 힘겨루기 와중에 조선과 한반도는 35년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독립해 주권국가로 국제무대에 등장했지만,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진영 논리 속에서 발발한 한국전쟁과 이후 전개된 냉전체제로 인해 양대 세력의 지정학적 단층선이었다. 이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됐다. 근대적 국제질서가 탈근대 국제질서로 변화하고, 다시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과 한반도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만 한다.<sup>2)</sup>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대변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킨들버거의 함정 용어가 등장하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면서 국제사회가 이룩한 수많은 약속된 세계질서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21세기 국제질서가 등장한다는 맥락으로 파악해야 한다.

1884년의 조로수호통상조약은 단순한 양국 간의 외교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체제가 태동하는 시기의 대표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러시아의 두 차례 수교, 즉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과 1990년 한·소 수교는 모두 국제질서의 격변기 속에서 이뤄졌다.

1884년은 전통적인 중화질서가 해체되고 제국주의 세력들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던 시기로, 조선은 기존 질서의 붕괴에 대응하여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수교는 조선이 추구하려는 자주외교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1990년의 한·소 수교는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종식되는 시점에서 한국과 소련 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고자 상호

2) 하영선, 남궁곤 편저,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07), p. 12.

간 전략적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

오늘날, 우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국제질서 재편의 전환점에 서 있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 체제가 유지해왔던 국제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러시아 간 외교 관계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러 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결과물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뤄졌다. 첫째, 역사적 외교사 분석이다. 조로수호통상조약이나 대한제국기 외교를 다룬 연구물들은 있으나, 현재적 맥락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었다. 둘째, 냉전 이후 외교정책 분석이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의 경제협력, 에너지 외교, 북핵 문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됐으나, 수교의 구조적 맥락을 장기적인 시계열로 분석한 논문은 드물다. 셋째, 최근의 국제질서 분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분석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한국-러시아 관계를 연계해 분석하는 시도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1884년, 1990년, 2025년이라는 시점을 연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관계가 갖는 지속성과 전환성을 동시에 조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하겠다.

상술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논문은 1884년, 1990년, 그리고 2025년 현재라는 세 시점을 관통하는 국제질서의 해체와 재편이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884년의 조로수호통상조약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되짚고, 동북아 정세의 전환기 속에서 한·러 관계의 전략적 복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글에서는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1990년 한소수교, 그리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등장하는 국제사회의 외교 환경이라는 세 전환기를 중심으로 한러관계의 역사적 반복성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세 시점은 모두 국제질서의 해체와 재편이라는 거시적 변환기와 맞물려 있으며, 한러관계는 항상 질서의 균열지대에서 전략적으로 출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은 단순한 역사적 순환이 아니라, 한러관계가 ‘구조적 이중성’을 내포한 관계임을 시사한다. 즉 양국은 각 전환기마다 새로운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경험했으며, 이 사실은 동맹이나 적대적 대립이

라는 고정적 관계보다는 전략적 선택지에 기초한 파트너 관계라는 특징을 드러낸다.

## II. 한국과 러시아의 만남과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한국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처음 접촉한 사건은 17세기 중엽, 만주와 아무르강 유역을 둘러싼 청과 러시아 간 국경 분쟁 속에서 발생했다. 특히 1654년과 1658년에 청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병한 ‘나선정벌’은 조선인이 러시아인을 최초로 목격하고 서로 교전한 사건이자, 양국 관계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17세기 러시아 제국은 시베리아 동진을 가속화하며 아무르강 유역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명·청 교체기 동안 사실상 권력의 공백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이에 러시아는 코사크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무장대를 보내 이 지역을 탐사하고 요새를 건설하며 점차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다. 러시아가 세운 대표적 전초기지가 바로 알바진(Albazin)이다. 러시아의 진출에 위협을 느낀 청나라는 1652년 팔기군이 러시아군에 패배한 후 조선에 원군 파견을 요청했으며, 조선은 외교적으로 청과 사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만큼 이에 응하여 두 차례 원정을 보낸다.

이렇듯 한국과 러시아의 첫 만남은 1649년 러시아가 태평양 연안에 도달한 지 약 5년이 지나 이뤄졌다. 국내 사학계에서 ‘나선정벌’(羅禪征伐)이라고 부르는 한국과 러시아의 첫 전투가 1654년에 발생했다. 1654년은 공식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인이 처음으로 접촉한 연도이다.

청차(淸差) 한거원(韓巨源)이 서울에 들어왔다. 상이 편전에서 접견할 적에 대신 들도 역시 입시하였는데, 거원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바쳤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조선에서 조창(鳥槍)을 잘 쏘는 사람 1백명을 선발하여, 회령부(會寧府)를 경유하여 양방장(昂邦章)의 통솔을 받아 가서 나선(羅禪)을 정벌하되, 3월초 10일에 영고탑(寧古塔)에 도착하시오.”... 영장(領將)은 어떤 관원으로 정하여 보내야 하겠소? ... 북우후(北虞候) 변급(邊戾)이 영장에 적합합니다.<sup>3)</sup>

3) 『조선왕조실록』. <효종실록>. 효종 5년 1654년 2월 2일.

청나라의 요청에 따라 조선군은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군과 교전했다. 1차 정벌 때는 병급이 조총수 100명, 화병 20명, 수병 30명 등으로 구성된 150명(혹은 152명)을 이끌고 청군과 연합해 아무르강/흑룡강 유역에서 ‘알바진’(Albazin) 진지에서 출정한 러시아군을 격파했다. 1658년 2차 정벌 때는 신유(申瀏)가 265명을 이끌고 청군과 연합해 아무르강 유역에서 러시아군에 승리했다. 신유는 『북정일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sup>4)</sup>

당시 조선군과 러시아군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상태에서 전투에 참여해 상대방을 ‘대비달자’(大鼻獺子)<sup>5)</sup>와 ‘대두인(大頭人)’이라 불렀다. 대비달자는 ‘코가 큰 몽골계 오랑캐’라는 뜻이고, 대두인은 ‘머리 큰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러시아인들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머리 큰 사람들이 매우 두렵다”라고 했는데, ‘머리 큰 사람’은 우리나라 병사들이 머리에 병거지(戰笠)를 쓴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sup>6)</sup>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의 나선정벌은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인이 만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조선이 조청 연합군을 구성해 전투에 참여한 것은 청의 요청에 따른 결과이지만, 근대 이전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이 능동적으로 외교 및 군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나선정벌은 단순히 청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조선의 원군 파병이지만, 당시 조선이 국제질서에 참여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외세의 압력이 본격화되기 전이지만, 조선이 군사력을 타국과 경계 분쟁에 동원함으로써 ‘외교적 주체성’을 잠재적으로 드러낸 초창기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출처: [http://sillok.history.go.kr/id/kqa\\_10502002\\_001](http://sillok.history.go.kr/id/kqa_10502002_001) (검색일: 2024.10.30)

- 4) 박태근은 1658년 2차 나선정벌에서 조선이 승리한 의미를 ‘국지전’이 아닌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 전투에서 러시아에게 승리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유 장군이 지휘한 조선 군대가 동아시아로 진출하려던 러시아를 처음으로 저지한 사건으로 당시 동아시아의 새로운 도전자인 러시아 세력을 물리쳤다는 데 세계사적 의미를 둔 것이다. 朴泰根, “러시아의 동방정략과 수교이전의 한러교섭(1861년 이전),” 韓國史研究協議會 編, 『韓露關係 100年史』 (서울: 正和印刷文化社, 1984), pp. 3-9 ; 송금영,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한반도 정책(1860~1905)』 (서울: 국학자료원, 2005), pp. 51-52 ; Б. Д. Пак, 『러시아와 한국』, 민경현 옮김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pp. 70-78.
- 5) ‘달자’는 몽골인들을 부르던 부정적인 용어였다. 보통 북쪽의 오랑캐 민족 혹은 몽골지역 거주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대비달자 이외에 태극달자(太極獺子)와 어피달자(魚皮獺子)가 있는데, 태극달자는 신장-위구르 족을 지칭하고, 어피달자는 흑룡강성 허저족을 지칭한다. 박성호, “조선 후기 연행사들의 滿洲·蠻子·獺子 인식과 事大 華夷觀의 충돌,” 『大東漢文學』, 제70집 (2022), pp. 55-60.
- 6) 박노자 외,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신인문사, 2011), pp. 36-37.

학계에서 인정된 1654년 공식적인 첫 만남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30년 정도 지난 1680년대부터 중국 북경에서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적대국으로 두번이나 교전한 사실조차 서로가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났던 것이다. 단절된 시간이 존재한 이유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청국을 매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청나라는 연행사로 파견된 조선의 사신들이 청의 허락 없이 숙소 밖으로 나가거나 상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문금정책’(聞禁政策)<sup>7)</sup>을 강요했다. 그런 까닭에 청국에 의해 투과된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굳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청국의 방해와 주입된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계기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능동적으로 러시아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경에 파견된 조선의 연행사들이 172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북경 러시아관(당시 명칭은 아라사관)을 오가며 러시아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884년 국교 체결이라 할 수 있는 ‘조로수호통상조약’을 맺을 수 있었다.<sup>8)</sup>

러시아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인식은 처음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1689년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된 후, 러시아인들이 북경에 상주하면서 조선인과 러시아인의 접촉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청나라의 견제 속에서 조선인이 러시아인을 접촉하기는 쉽지 않았다. 청나라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이었다.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 지식인들에게 러시아는 점차 실체를 갖춘 두려움의 대상이자 궁금증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북방 국경 문제, 특히 간도 지역과 연해주 인접 지역에서 러시아 활동 증가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었다.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러시아를 ‘아라사’(俄羅斯) 또는 ‘악라사’(鄂羅斯), ‘라사’(羅斯)로 표기하며, 그들의 외모, 무력, 문화 등에 대한 묘사를 남겼다.

18세기 후반 실학자 박제가(朴齊家)는 『북학의(北學議)』에서 러시아와 무

7) ‘문금’(聞禁)이란 말 그대로 “듣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다. 즉 청나라 내부 정세에 대해 묻거나 듣지 말라는 금지령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청나라 정부가 조선 사신들에게 강요한 일종의 ‘외교적 통제’였다. 청나라는 외교 사절의 체류를 허용하면서도 자국 내 정세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다. 문금정책은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 머무는 동안 황실 및 내정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묻거나 들을 수 없도록 강제한 제도적 조치였다. 청나라가 대외적으로는 안정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금정책은 북경에 거주하던 러시아 사절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듯하다.

8) 박노자, op. cit., p. 37.

역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러시아인의 외양에 대해 “키가 크고, 얼굴이 붉고, 코가 높으며, 눈이 깊다”고 묘사하였다.<sup>9)</sup> 이 사실은 1654년과 1658년 나선정벌 당시 병사들이 목격한 러시아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이 170년 가까이 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전승됐음을 보여준다. 박제가는 러시아의 강력한 무력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표출했으며,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병행해 러시아와 같은 강국에 대한 조심스러운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 계기는 북경을 방문한 연행사들은 러시아를 몽골계 오랑캐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에게 조공을 받치지 않고, 조선 사절단이 사용하던 숙소인 옥하관(玉河館)을 사용하며, 중국보다 국토 면적이 3배가 넓다는 정보를 듣고 난 후이다. 더욱이 당시 서양식 신식문물로 알려진 자명종과 자명금을 러시아인이 갖고 있다고 사실을 접한 조선 지식인들은 ‘야만과 문명’이라는 이중잣대로 러시아에 대한 호기심을 표출했다.<sup>10)</sup>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며 러시아의 동진(東進)은 조선 지식인들의 위기감과 국경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특히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 공문서와 함께 지식인 개인의 일기, 문집, 지리지에도 러시아 관련 서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유희(劉熙)는 『언문지(諺文志)』에서 러시아를 “북방의 야만적이나 무력과 외교에 능한 나라”로 간주하면서, 그들이 청과 조선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1)</sup> 그는 러시아에 대해 단순한 오랑캐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근대 국가적 위상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러시아 인식은 단선적인 ‘오랑캐’ 시각에 머물지 않고, 문화적 이질성과 무력에 대한 경계, 그리고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반응이라는 다층적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 사실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단순한 문화적 배타주의를 넘어, 현실 정치와 외교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러시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축적된 인식은 후에 조로수호통상조약

9) 박제가, 『북학의』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p. 75.

10) 박성호, *op. cit.*, pp. 59-60.

11) 유희, 언문지, 『조선후기 실학자 문집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p. 208.

체결 당시, 조선 내부에서 러시아에 대한 ‘기회와 위협’으로서 양가적 태도가 형성되는 배경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말기 조선 지식인들의 국제 정세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문서 가운데 하나는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저술한 『조선책략(朝鮮策略)』이다. 이 문서는 1880년 조선이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을 일본에 파견했을 때 황준헌이 그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후 조선 조정에 보고되며 본격적인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황준헌(黃遵憲)이 쓴 『조선책략』(朝鮮策略)은 조선 말기 국제정세와 외교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책으로, 특히 조선의 개화파와 조선 정부의 대외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문헌이다. 중국의 개화지식인이자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은 일본에서 주재하던 1880년 무렵 조선책략을 집필했으며,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됐던 김홍집에게 이 책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 책의 내용에 조선은 첫째, 친중국(親中) 정책을 통해 기존의 중국과 주종관계 속에서 현상유지로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둘째, 결일본(結日本)해서 근대화를 이룬 일본과 협력해야 하며, 셋째, 연미국(聯美國) 원칙을 통해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서방세계와 연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방어하는 목적으로부터 도출됐다.

수신사로 파견됐던 김홍집은 귀국 후 고종에게 이 책의 존재를 보고하고, 그런 까닭에 『조선책략』은 조선 정부가 추진하던 외교 전략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 특히 박영효, 김옥균 등 개화파의 활동에 이론적 근거 제공했다. 하지만 반대로 쇄국파와 위정척사파로부터는 ‘매국적인 외세 의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책략』은 청국 외교관 황준헌의 개인적 견해로 작성된 문건이며, 그 목적은 러시아의 동진(東進), 즉 남하정책에 대한 견제였다. 단지, 외교관인 황준헌의 개인적 의견이 당시 청나라 외교 전략의 기초와 긴밀히 맞닿아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나 사상을 밝힌 책이라보다 청나라 정부의 비공식적 입장을 반영한 준외교문서라고 보는 해석이 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sup>12)</sup> 즉 『조선책략』이 청국의 ‘대러시아 견제 정책’의 일환으

12) 이태진, “조선책략과 조선의 근대외교,” 『서울대학교 한국사연구소 논문집』, 제5집 (1994) ; 박영규, 『조선의 선택, 개화냐 쇄국이나』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 이종범,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대한

로 가능했다는 점과 황준헌의 저술이 개인의 의견이지만 동시에 조선의 대중국 외교의 방향성과 밀접히 관련됐으며, ‘정책 건의서’와 ‘전략적 조언서’ 등 복합적 성격의 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청국이 취하고 있던 ‘연미 결일’ 외교노선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책략』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도 고종이다. 고종은 러시아가 동쪽으로 진격해 중앙아시아와 위구르 지역을 점령하고 극동지역과 한반도까지 진출하려고 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청국의 입장을 정리한 조선책략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고종은 청나라에 의지하여 독립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청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청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sup>13)</sup>

그리고 좀더 확대해 해석하면, 황준헌이 일본에 우호적 입장을 견지한 정책을 저술했다는 개연성이다. 황준헌은 1877년~1881년 동안 청국의 주일본 공사관 참찬관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한 근대화와 대외 팽창 전략을 추진 중이었고, 일본 역시 러시아의 남하를 경계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일본의 국내외 정세를 옆에서 관찰하던 황준헌은 조선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과 연합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조선책략』에는 일본을 ‘문명개화의 나라’로 묘사하며, 조선이 본받아야 할 나라로 언급하는데, 이 내용은 당시 일본과 우호를 도모하려는 외교적 수사이자 정치적 배려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황준헌은 일본에 우호적 서술을 통해 조선의 대외전략을 본인과 청의 노선으로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수 있다.

『조선책략』은 그 자체로 조선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 정세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동시에 이 문서는 청나라 중심의 질서 유지를 전제로 한 제한적 외교방향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외교 주체성의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책략』은 조선 외교사에서 근대적 국가 생존 전략에 대한 가장 빠른 문제의식을 담은

연구,” 『동방학지』, 제145집 (2009) ; Wang, Dong,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 History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Rowman & Littlefield, 2013) ; Immanuel C.Y. Hsu, *The Rise of Modern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Zhao, Suisheng,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Palgrave Macmillan, 2008).

13) 최덕규, 「근대 한러관계사(1860-1910)」, 국제교류재단·한러소사이어티·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러관계사』, 제1권 (2022), pp. 23-24.

문서로 평가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함께 변화하는 국내상황에서 러시아와 수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 배경은 첫째, 임오군란(1882) 이후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심해지자, 조선 정부는 청의 과도한 간섭을 견제하고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모색했다. 둘째, 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 조약 이후 북동항 확보와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고자 했다. 셋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의 한반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은 러시아를 외교정책의 균형추 세력으로 삼아 서구의 위협에 대응하려고 했다. 넷째, 영국의 거문도 점령으로 조선의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조선은 러시아와 조약을 통해 청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즉 이런 배경하에 조로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청나라의 내정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외세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체결한 외교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조로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은 1884년 7월 7일(윤5월 15일)에 체결됐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 조약의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다.<sup>14)</sup> 첫째, 조선은 러시아와 공식적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인천(제물포), 원산, 부산 등 주요 항구를 러시아에 개방해 무역과 거주, 토지 임대 및 매매, 공장 설립 등 러시아인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허용했다. 즉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부산(釜山), 만약 부산 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명되면 인근의 다른 지역, 한양(漢陽, 서울)과 양화진, 혹은 서울 근교보다 편리한 장소 등을 러시아의 무역을 위해 개항한다. 상기의 개항장에서 토지나 가옥의 임대 또는 구매, 건물이나 창고 및 공장의 건축 등을 러시아 인민에게 허용한다. 러시아 인민은 자유로운 종교의식을 수행할 권리를 지닌다. 대외무역에 개방된 조선의 각 항구와 지역에서 조계(租界)용 부지의 선정, 경계의 획정 그리고 토지 매각에 대한 시안은 조선 당국이 외국의 관할 당국과 공동으로 처리한다.

둘째,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러시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열강과 대등한 입장에서 조선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조선은 청나라의 내정간섭에서 벗어

14) 조로수호통상조약의 상세한 번역본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동북아역사넷’ 사이트(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 자세히 수록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곳을 참조. АВПРИ, ф.150, оп.493, д.214, лл.6-14об.

나기 위한 외교적 선택지로 러시아를 활용하게 됐다. 셋째, 러시아는 자국이 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육로무역 규정도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조선과 청의 반대로 일단 해상무역에 한정된 조약이 먼저 체결됐고, 육로 통상조약은 1888년에 ‘육로통상장정’ 이름으로 별도로 체결됐다.

정리하자면,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러시아와 공식 외교·통상 관계를 맺으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외교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조선과 제정러시아의 수교는 서구 열강으로부터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외교적 대안이었다. 1880년의 조선과 한반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해 있던 러시아의 레쉴스키 함대와 조선과 수교를 위해 일본에 머물고 있던 미국의 슈펠트 제독 등 두 국가와 더불어 오늘날 한반도 주변 4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힘의 균형’ 체제가 구축돼 있었다. 전통적인 중화적 질서가 무너지고, 새롭게 패권국가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통 강국인 청나라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려고 했다. 즉 ‘3일천하’의 갑신정변을 진압하면서 한반도에 중화적 질서를 환원시키려고 했다. 그런 까닭에 고종과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과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여 그들의 보호 속에 조선을 편입시키고자 했던 것이다.<sup>15)</sup>

### Ⅲ. 냉전체제 붕괴와 1990년 한러수교

1985년 3월 11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등극한 이후, 그는 침체된 소련 경제를 살리기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재건을 뜻하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공개를 뜻하는 글라스노스트를 통해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를 다시 건설한다는 경제 계획을 포함해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법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개혁의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했다. 개혁의 과정에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을 통해 소련이

15) 최덕규, 「근대 한러관계사(1860-1910)」, 국제교류재단·한러소사이어티·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러관계사』, 제1권 (2022), p. 28.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속한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 교류 필요성을 언급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전날인 9월 16일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국과 교류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했다. 이후 약 2년이 지난 뒤 1990년 9월 30일 역사적인 한소수교가 완성됐다. 당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명분 아래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sup>16)</sup>

이렇듯 1990년 9월에 체결된 한소수교는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그가 소련경제를 살리기 위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가 적실성의 위기를 맞으며 국제질서의 재편 개연성이 존재할 때 성사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련의 개혁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이 톱니바퀴로 맞물리면서 발생한 사례이다. 더욱이 1989년 미·소 정상회담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사회는 급속한 냉전 해체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미국 역시 소련과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있었으며, 이 외중에 한국의 북방외교에 대해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다.<sup>17)</sup>

한국의 북방정책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으로 시작한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른바 ‘7·7선언’은 냉전의 해체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가 분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포괄적 대북 및 대외정책 비전으로서 이후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한반도 외교의 구조적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선언으로 평가된다.

‘7·7선언’이 발표된 1980년대 후반은 국제사회에서 냉전 질서가 약화되던 시기였다. 상술했듯이,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통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율화와 서방과 화해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중국 역시 개혁·개방 노선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질서 재편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다.<sup>18)</sup>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군부독재가 종식되

16) 황성우, “19세기 조러 수교 시기 사례를 통해 본 한러 협력의 대안적 모색,”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2021년 겨울), p. 166 ; 황성우 “동북아 新안보 지형의 통시적 해석,” 『슬라브연구』, 제40권, 제1호 (2024), p. 49.

17)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1997), pp. 216–219.

18) 이정철, “1980년대 후반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북방정책,” 『현대정치연구』, Vol. 18 (2005), pp. 144–145.

고 등장한 민선 정부의 정통성 확보와 통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국내 정치적 요구 역시 이 선언의 추진 배경이 됐다.<sup>19)</sup>

다시 말해서 7·7선언은 1987년 4·13 호헌 조치에 따른 6·10 항쟁, 그 결과로 발표된 6·29 선언 이후 국내 민주화 세력이 남북 교류 협력을 중시하는 통일운동을 추구하자, 집권에 성공한 보수세력이 통일 외교정책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남북한 교류 추진을 선언하고, 남북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하며, 동시에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개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즉 노태우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소련과 관계를 원했던 것이다.<sup>20)</sup>

‘7·7선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남북 상호 인정이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본다는 표현을 통해, 남북 간 실질적 공존을 전제로 한 관계 전환을 시도했다. 둘째, 북방외교의 명분화이다. 북한의 고립을 우회하여 중국,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셋째, 교류 확대와 국제 참여 보장이다. 남북 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도 조건부로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sup>21)</sup> 이 선언은 기존 반공·흡수통일 기조에서 벗어나, 평화공존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일전략을 제시한 첫 공식 문건이었다.

그런 까닭에 ‘7·7선언’은 이후 북방외교의 이론적·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특히 1990년 한·소 수교, 1992년 한·중 수교 등은 모두 이 선언의 직접적 연장선 위에서 이뤄졌다. 동시에 ‘7·7선언’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전개에도 이론적 정서적 기반을 제공했다.<sup>22)</sup> 물론 이 선언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크게 진전시킨 것은 아니며, 북한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했다. 동시에 한국이 소련, 중국과 수교한 반면에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지 못해 북한의 고립화가 진행됐으며, 북한 핵개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7·7선언’은 냉전적 대결 프레임을 해체하고,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재설계

19) 김상협,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 『통일연구』, Vol. 11, No. 1 (2003), pp. 22–23.

20) 박노자, *op. cit.*, p. 248.

21) 이삼성, “7·7선언의 외교적 함의,” 『한국외교사연구』 Vol. 16 (2008), pp. 117–119.

22) 박명규, “7·7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제도화 과정,” 『동북아정치논총』, Vol. 19 (2011), pp. 90–92.

한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sup>23)</sup>

이렇듯 전후 세계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의 적실성 위기가 발생하고, 냉전이 와해되는 분위기 속에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에 성공했다. 냉전 말기 한국이 직면한 주변 국제상황을 타파하고자 활용한 전략이 ‘북방정책’으로 상징화되는 유라시아 대륙 진출 전략이었다. 한국은 유라시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1990년 소련과 수교한 후 2년이 지나 중국과 수교했고,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몽골 등 거의 모든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에 성공했다.<sup>24)</sup>

큰 틀에서 보자면, 소련은 침체된 자국의 경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한국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북방정책을 추진하다가 두 국가의 국익이 중복되는 영역에서 한소 수교는 달성됐다. 달라진 상황은 한소 수교 이후 공식적으로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의 국제법상의 지위가 러시아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이후 냉전 말기와 탈냉전 초기 글로벌 차원과 동북아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미국과 서방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새롭게 출범한 신생 러시아연방을 국제체제에 우호적으로 편입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유화정책을 추진한 사실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굴곡의 역사를 서로 화해하고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글로벌 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먼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전방위적 차원에서 준(準) 동맹적 관계를 구축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기에 협력이 미미했거나 협력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 일본과도 우호적 협력을 확대 강화했다. 심지어 2001년 9·11 이후 ‘테러와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안방과도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군사기지를 용인했다.<sup>25)</sup>

탈냉전기 동북아에 밀어닥친 구조적 변화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sup>26)</sup> 첫째, 이념을 초월해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전방위적으로 협력 구조가

23) 정재호, “탈냉전기 남북관계 구조의 전환과 7·7선언의 의의,” 『국제정치논총』, Vol. 36, No. 2 (1996), pp. 101-104.

24) 김석환, “한러 수교 20년의 성과와 과제,”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러포럼 2010년 5월 발표문』; 김석환, “한러 수교 20년과 냉전 질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 『사회과학연구』, 제32집 (2010. 10), pp. 21~39.

25) 황성우,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안보지형,” 표상용 외, 『세계 속의 러시아: 루스키 미르』 (서울: HUINE, 2025), p. 147.

형성된 점이다. 한국은 냉전 말기 북방정책을 시작으로 햇볕정책, 동북아시대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新북방정책 등으로 상징되는 對유라시아 정책을 통해 동북아 내 모든 국가들과 이념을 넘어선 상호의존형 협력 구조를 추구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지역의 경제협력 구조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둘째 북중러 북방 3국 간 동맹 구조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한 기존 구조의 해체와 변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지역 북방 3각 안보 구조의 핵심인 군사동맹 구조의 변화이다. 우선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동맹 조약이 1996년 9월 10일 공식 폐기됐다.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중국과 북한 간 군사동맹 조약은 유지됐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 됐다.

셋째 동북아에 새로운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출현했다. 한국은 1990년 9월 30일 소련,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하고 이들 국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반해 미국, 일본과 국교 수립에 실패한 북한이 야기한 핵 문제가 대표적이다.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켜 탈냉전기 동북아 안정에 최대 위협 요소가 됐다.

넷째 동북아에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이다. 이런 움직임은 냉전기에도 시도했던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서도 부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북아 다자안보 추진 전략이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고 역내 국가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다자안보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동북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평화와 안정을 제도화하는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이 절실하다고 봤다.<sup>27)</sup>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6자회담의 틀을 동북아 안보대화의 틀로 발전시키는 것까지 고려했다. 특히 2007년과 2009년에 개최된 6자회담 실무회의에서 나타난 참여국들의 회담 논의 내용과 과정을 통해 6자회담의 틀을 동북아 안보대화를 논의할 틀로서 승화시킬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국내외 학계도 장기적으로 6자회담이 동북아의 다자간안보기구로 발전할 개연성에 대해 주목했다.<sup>28)</sup>

26) Ibid., pp. 147-148.

27)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변명과 국가안보” (2004), pp. 55-56.

하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주변국들도 6자회담의 확장 구상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논의는 현실화 되지 못했다.<sup>29)</sup>

#### IV.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과 1990년 한소수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지속되는 2025년 현재적 시점에서 바라볼 때,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사회가 지난 30년 간 어렵게 만들어낸 세계화의 산물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 합의를 이끌어낼 글로벌 리더십과 대전략(*grand strategy*)을 고안해 내는 전략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영적 대립을 넘어서는 상호의존적 세계화는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의 힘’이 ‘대립의 힘’보다 인류 평화와 발전에 더 유용하고 경제적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축적돼 가능했던 것이다. 그 결과의 하나가 독일의 통일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체제 통합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 북방정책도 이러한 상호의존적 세계화의 긍정적인 산물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진영 간 대립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국제사회에 재등장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 러시아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구축한 세계화, 경제적 상호 의존과 같은 긍정적 산물이 퇴보하고,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 미중 무역 갈등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중첩적 위기 속에서도 공동으로 대응한 합의체 노력이 사라진 것이다.<sup>30)</sup>

2025년 시점에서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과 1990년 한소수교,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28) Charles Perry and James Schoff, “Building Six-Party Capacity for a WMD-Free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VI, No. 2 (2004), pp. 7-26.

29) Gregg Andrew Brazinsky, “The United States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Vol. 32, No. 2 (2008), pp. 21-36 ; 유동원,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방안 분석,” 『사회과학연구』 Vol. 35, No. 1 (2009), pp. 91-110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2004), pp. 55-56.

30) 김석환, “글로벌 복합위기와 대전략의 실종,” 『세계일보』 (2022.4).

세 시기 모두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환기였다. 각 시점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중심이 아닌 새로운 질서 형성의 주변부에서 전략적으로 등장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1860년 북경조약에 따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닿게 됐다. 이후 1884년 공식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기까지 24년이 필요했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두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양국 속에 내재된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가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조건은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적 국제질서의 우선적 와해였다. ‘제국과 식민지’라는 국제사회의 지배구조가 우세했던 시기에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조선은 주체적 입장을 갖고 외교무대에 등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1884년 조약은 제국주의 확장의 시대와 조선의 대응이라는 결과물로 등장했다.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은 동아시아에 대한 서구 열강과 러시아 제국의 경쟁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체결됐다. 이 시기에 청나라 중심의 중화사상 및 동아시아 질서의 균열이 시작됐으며, 이 와중에 조선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해 러시아와 다자 외교를 통한 주권 방어를 시도했다. 물론 러시아는 이 와중에 ‘거대게임’(Great Game)으로 대변되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극동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러시아의 전략적 행보는 조선에게 ‘새로운 균형자’로서 러시아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90년 조약은 냉전의 종식과 다극화 체제 형성의 결과물로 등장했다. 1990년 한소수교는 냉전의 해체라는 구조적 전환 속에서 이뤄졌다.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두 축을 중심으로 개혁을 통해 체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권 국가들과 경제·외교적 다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한소수교는 양국 모두에게 체제 전환기에서 새로운 전략적 기반을 모색하는 실용 외교의 성과였다.

2022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시작이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후 유럽 안보체제의 붕괴와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발생했다. 이 전쟁은 세계 경제의 탈세계화, 신냉전 구조의 고착화, 에너지·식량 안보의 위기로 직결됐다. 전쟁 시작과 더불어 한국은 미국 중심의 가치 외교에 동참하면서도, 에너지·북핵 문제로 인해 러시아와

단절을 경계하는 이중적 전략 공간에 놓였다. 또한 다소 성급한 친우크라이나 정책으로 러시아에게 비우호국으로 분류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입장 차이는 한러관계가 다시 한 번 질서의 전환기 속에 전략적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한러관계는 항상 新질서의 형성과 함께 등장한다. 구조적 반복성과 역사적 패턴의 순환구조가 존재한다. 한러관계는 단순한 양자 외교의 산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양국 관계의 수립 및 재조정은 항상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기와 긴밀히 연동돼 등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우연한 시점의 일치가 아니라, 양국이 국제적 체제 전환의 틈새에서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 했던 외교적 반복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1884년은 제국 질서의 확산 속에 조선과 제정러시아가 수교했다.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은 서구 열강의 본격적인 동아시아 침투,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붕괴, 일본의 부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체결됐다. 동북아에 한정하자면, 중국의 몰락과 일본의 부상이었다. 즉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의 해체와 동시에 일본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러시아는 두 세력의 대안자로서 조선에게는 새로운 외교적 해결사였다.

1990년 한소수교는 냉전 질서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출현했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해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외교 다변화를 꾀했고, 그들과 함께 수출시장의 확대를 도모했다. 소련은 내부 개혁과 대외 관계 정상화를 통해 고립 탈피를 시도했다. 수교는 단지 양국의 이해관계 일치 때문만이 아니라, 동서 냉전 이념 블록이 해체되는 과도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 내 입지를 모색한 결과였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의 안보적 긴장감을 증대하고, 신냉전 대립구조를 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반도 주요 전략 공간의 긴장도 고조됨과 동시에 한국의 경제안보 확보 비용도 상승했다. 남북한 모두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해 긴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교전 상대국에 대한 남북한 무기 공급, 북한군 파병 등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친서방 노선을 추종해야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와 관계 복원 등 한국의 자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환기 속 한러관계는 기회와 제약이라는 두 가지 구조가 존재했다. 한러 관계는 그 속에서 ‘기회의 창’과 ‘구조적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전개됐다. 특히 러시아는 조선과 한국에게 외교적 기회로 등장했지만, 한반도는 항상 주변 강대국(미국, 중국(청), 일본 등)과 삼각관계 속 제약 요소를 수반했다. 세 시기를 기회와 제약의 구조로 비교분석한 도표는 아래와 같다.

〈전환기 한러관계의 기회-제약 구조 비교표〉

시점	국제질서 변화	주요 기회요인	주요 제약요인
1884년	제국주의 질서의 아시아 확장	러시아를 통한 외교 조정자 기대	조선의 군사 경제 국력 취약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 균열	러시아의 조선 진출 기대감	중국의 내정간섭과 외교 제한
	영국과 러시아의 거대게임	주변열강 속 자율 외교공간 확보	러시아의 전략적 일관성 부재
1990년	냉전의 붕괴와 종식	북방정책 성공과 외교 다변화	러시아 편중 외교의 부담
	동유럽 사회주의권 체제 붕괴	사회주의권 수출시장 확대	북한과 중국의 견제
	동북아 다극체제 형성	남북한 UN 가입 및 균형외교	한미동맹의 속 러시아협력 제약
2022년~	유럽 안보체제 붕괴	에너지 협력 및 지경학적 연계	대러제재 동참 속 관계 경색
	미중 무역갈등 심화	다자간 외교와 자율공간 확보	미국 중심의 가치 외교 압력
	탈냉전 세계화의 붕괴	비서구권 전략적 자율성 확보	한반도문제 속 러시아 역할 감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후라도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서방세계’(Collective West)와 러시아와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등 두 축의 대립은 강화되는 분위기가 지속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G7에 의한 대러 제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전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서방세계와 글로벌사우스가 대립한다는 의미는 국제사회가 양 진영으로 분열하는 방향으로 국제정세 및 지정학적 전개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 진영의 지정학적 분단은 안보적 측면만이 아닌 식량, 기후 위기 문제를 둘러싼 전통적인 남(South)과 북(North) 대립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과거 비동맹, 즉 제3세계와 유사하게 인도, 브라질 등 두 진영에 확실하게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에 속한 국가들을 非러시아, 非미국 노선을 놓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외교적 줄다리기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 탈피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 공급의 중심지인 중동을 둘러싼 공급 및 가격 안정성 문제도 동시에 대두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미래지향적 운명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먼저, 한러관계는 항상 기존 질서의 균열과 새로운 질서의 형성기, 즉 체제 전환기의 ‘틈’ 속에서 등장해 왔다. 이 사실은 양국 관계가 본질적으로 국제질서 구조 외부의 안정성보다는 구조 내부의 불확실성에 의해 동기화돼 왔음을 의미한다. 1884년엔 서구제국 간 경쟁의 경계에 조선이 있었고, 1990년엔 냉전 해체의 경계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가 이뤄졌으며, 2022년 이후엔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계에 한국과 러시아가 있다.

둘째, 한러관계는 기회와 제약이 동시에 공존하는 구조적 이중성에 항상 노출됐다. 세 시점 모두에서 ‘새로운 기회’와 ‘본질적 제약’이 공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사실은 한러관계의 미래 또한 단선적 발전이나 급속한 후퇴가 아닌, 반복적 조정과 유예의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외교적 여지를 제공하면서도, 외부의 제재나 진영의 논리 압력에 노출돼 있다. 그런 까닭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실용적 협력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동시에 신뢰의 지속적 누적은 간헐적이고 전략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한반도 문제의 해결사, 혹은 조정자, 적극적 지지자 역할로 설정해 왔다. 각 시점에서 나타난 한러 관계의 기회요인도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에 기대하는 면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러시아는 반러감정, 서방세계의 제재, 국제적 고립 심화, 탈세계화, 중·러 밀착, 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으로 인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파트너로서 제약이 따르는 상대자가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런 까닭에 오히려 한러관계는 ‘제도적

정상화'보다 국면별 영역별로 전략적 조정이 가능한 외교적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및 동북아 정세에서 러시아와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외교적 행보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안정에 훼손되며, 한국의 국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서방세계와 글로벌사우스의 진영간 대립이 지속되고,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권위주의 vs. 민주주의' 축의 진영적 대결이 더욱 격화되는 것도 한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V. 결 론

상술했듯이, 본 글에서는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1990년 한러 수교, 그리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 질서의 해체와 재편이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한러관계가 어떻게 형성·재구성돼 왔는가를 살펴봤다. 이 세 시점은 단지 우연한 시간적 간격이 아니라, 질서의 균열기에 형성된 전략적 수교의 반복적 패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1884년은 동아시아에서 중화 질서가 무너지던 전환기였으며, 조선은 러·청·일 사이에서 외교적 자율성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1990년은 냉전 질서가 종식되는 시점으로서 한국은 북방외교를 통해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며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열었다. 오늘날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탈냉전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고 있는 시기를 목도하고 있다. 세 시기의 공통점은 모두 '기존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태동'이라는 전환점에서 한러관계가 재구성되었다는 데 있다.

근대 이후 그리고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제국의 시대'(1875~1914)로 규정한 시절에 조선과 한반도는 '제국과 식민지'라는 이분법적 시각만 존재하는 국제정치의 대표적인 발화 현장이었다. 조선과 한반도 주변 지역은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 질서 속에 오랜 기간 유지돼 왔다. 중화적 국제질서가 붕괴된 시점은 19세기 서세동점의 격동기에 중국이 서구열강들의 침략에 무너

지고, 동북아가 서방 열강들의 세력각축장이 된 때였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열강들의 힘겨루기 와중에 조선과 한반도는 35년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독립해 주권국가로 국제무대에 등장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진영 논리 속에서 발발한 한국전쟁과 이후 전개된 냉전체제로 인해 양대 세력의 지정학적 단층선이었다. 이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며,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됐다.

근대적 국제질서가 탈근대 국제질서로 변화하고, 다시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과 한반도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만 했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면서 이룩한 약속된 세계질서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탈냉전에서 다시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21세기 국제질서가 등장한다는 맥락으로 파악해야 한다.

급변하는 전환기 속 한러관계는 단일한 역사적 맥락이나 이념적 연속성 속에서 형성된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기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유동적이고 전략적으로 구성된 외교적 틈새에서 발전해 온 사례에 가깝다.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1990년 한소수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양국 관계는 세 번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역사적 반복성과 구조적 이중성을 확인한 사례들이다.

1884년은 동아시아 전통질서가 서구 열강의 개입으로 균열되던 시점이며, 1990년은 냉전이라는 이념질서가 해체되던 순간이었다. 2022년 이후는 미중 전략경쟁, 유럽 안보질서 재편, 탈세계화가 맞물리며 포스트 냉전 질서 자체가 해체되는 시기로 평가된다. 세 시기 모두에서 한러관계는 단순한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서의 공백기와 과도기적 유예 상태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따라 형성됐다. 이런 구조는 한러관계가 항상 동일한 외교적 반복성을 가진다는 인식을 넘어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선택의 주체로 등장했는가, 아니면 수동적 대응자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답을 주고 있다.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서방세계와 고립돼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이란, 인도, 브라질 등과 전략적 협력망을 통해 ‘비서방적 세계질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을 지속할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기존 질서와 경쟁적으로 작동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한국 외교에 복잡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양자관계와 다자외교를 병행하는 ‘다중 벡터 전략’(multi-vector diplomacy)을 통해 러시아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한러관계를 전통적 ‘변수’(variable)가 아닌 ‘독립된 축’(axis)으로 재평가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1884년 · 1990년 · 2025년이라는 세 격변기의 교훈은 국제질서의 전환기야말로, 한국 외교가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러관계는 국제질서의 균열기마다 등장하지만, 그 운명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환되고 조정되는 관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러관계는 동맹적 고정성보다는 시기별 선택적 조율에 따라 특징되는 ‘경계적 외교 파트너’로 규정될 수 있다. 즉 한러관계는 ‘반복되는 기회’이자 ‘반복되는 시험 무대’로서 작동할 것이며, 전환기의 문이 열릴 때마다, 한국은 선택을 요구받고, 선택의 결과는 구조적 위치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미래의 한러관계는 ‘예측’이 아닌 ‘준비’의 대상이다. 새로이 등장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특정국가에 몰입하는 지난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미래적 한러관계를 구축하리라 한껏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2004).
- 김상협.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 『통일연구』. Vol. 11, No. 1 (2003).
- 김석환. “글로벌 복합위기와 대전략의 실종.” 『세계일보』 (2022.4).
- 김석환. “한러 수교 20년의 성과와 과제.”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러포럼 2010년 5월 발표문』.
- 김석환. “한러 수교 20년과 냉전 질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 『사회과학연구』. 제32집 (2010. 10).
- 박노자 외.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신인문사, 2011.
- 박명규. “7·7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제도화 과정.” 『동북아정치논총』. Vol. 19 (2011).
- 박성호. “조선 후기 연행사들의 滿洲·蠻子·獐子 인식과 事大 華夷觀의 충돌.” 『大東漢文學』. 제70집 (2022), pp. 41-67.
- 박영규. 『조선의 선택, 개화냐 쇠국이냐』.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 박제가. 『북학의』.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 朴泰根.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이전의 한러교섭(1861년 이전).” 韓國史研究 協議會 編. 『韓露關係 100年史』. 서울: 正和印刷文化社, 1984.
- 송금영.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한반도 정책(1860~1905)』. 서울: 국학자료원, 2005.
- 이삼성. “7·7선언의 외교적 함의.” 『한국외교사연구』. Vol. 16 (2008).
- 이정철. “1980년대 후반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북방정책.” 『현대정치연구』. Vol. 18 (2005).
- 정재호. “탈냉전기 남북관계 구조의 전환과 7·7선언의 의의.” 『국제정치논총』. Vol. 36, No. 2 (1996).
- 유동원.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방안 분석.” 『사회과학연구』. Vol. 35, No. 1 (2009).
- 유희, 언문지. 『조선후기 실학자 문집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 이종범.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대한 연구.” 『동방학지』. 제145집 (2009).
- 이태진. “조선책략과 조선의 근대외교” 『서울대학교 한국사연구소 논문집』. 제5집 (1994).
- 최덕규. 『근대 한러관계사(1860-1910)』. 국제교류재단·한러소사이어터·한국

- 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러관계사』. 제1권 (2022).
- 하영선, 남궁곤 편저.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07.
- 황성우. “19세기 조러 수교 시기 사례를 통해 본 한러 협력의 대안적 모색.”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2021년 겨울).
- 황성우. “동북아 新安보 지형의 통시적 해석.” 『슬라브연구』. 제40권, 제1호 (2024).
- 황성우.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안보지형.” 표상용 외. 『세계 속의 러시아: 루스키 미르』. 서울: HUINE, 2025.
- Пак, Б. Д. 『러시아와 한국』. 민경현 옮김,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 Brazinsky, Gregg Andrew. “The United States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Vol. 32, No. 2 (2008).
- Dong, Wang.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 History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Rowman & Littlefield, 2013.
- Hsu, Immanuel C.Y. *The Rise of Modern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1997.
- Perry Charles and Schoff, James. “Building Six-Party Capacity for a WMD-Free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VI, No. 2 (2004).
- Suisheng, Zhao.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Palgrave Macmillan, 2008.
- АВПРИ, ф.150, оп.493, д.214, лл.6-14об. (동북아 역사넷)  
『조선왕조실록』. <효종실록>. 효종 5년 1654년 2월 2일.  
출처: [http://sillok.history.go.kr/id/kqa\\_10502002\\_001](http://sillok.history.go.kr/id/kqa_10502002_001) (검색일: 2024.10.30)

Abstract

## 140 Years of the Korea–Russi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 Historical Recurrence and Contemporary Implications of Korea–Russia  
Relations in Transitional International Orders -

Hwang, Sung-Woo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Russia diplomatic relations through the lens of transitional moments in the international order. Marking the 140th anniversary of the 1884 Korea–Russi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this research focuses on three critical periods—1884 (the era of imperial expansion), 1990 (the end of the Cold War), and 2022 (the geopolitical upheaval following the Russia–Ukraine war)—to analyze the structural conditions under which Korea–Russia relations have repeatedly emerged.

Rather than viewing Korea–Russia relations as a product of linear progress or episodic disruption, the study argues that these relations constitute a “liminal partnership” forged in times of systemic flux. They are characterized by structural duality, in which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coexist. Each diplomatic engagement unfolded within a broader context of geopolitical transformation, offering Korea both room for strategic maneuvering and inherent limitations tied to the global balance of power.

The study further explores how South Korea has utilized relations with Russia to pursue foreign policy objectives in each era, and it assesses the potential trajectories of Korea–Russia ties amid the reconfiguration of the post-2022 international order. The paper concludes that Korea–Russia relations, far from being a passive reflection of global change, can serve as a strategic axis in the active construction of a future diplomatic architecture.

